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6월 22일 수요일 (음 5월 18일) 제 158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의회 의장 후보 이상현 부의장에 조병서·강영수

(더민주 소속)

더민주 의원총회... 의장단·상임위원장 후보 확정

운영위원장 송지용·환복위원장 최훈열 등 후보자 선출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들 “협치 없는 일방적인 선출 반대”

전북도의회 하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 표결 구도가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간 갈등 양상을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긴급회의에 이어 21일 의원총회를 갖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확정했다.
의장 후보는 당초 황현 의원(익산3)이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이상현 의원(남원1)이 선출됐다.
제1부의장 조병서(부안2), 제2부의장 강영수(전주4), 운영위원장 송지용(완주1), 행정자치위원장 송성환(전주3), 환경복지위원장 최훈열(부안1), 문화관광건설위원장 한완수(임실), 산업경제위원장 이학수(정읍2), 교육위원장 장명식(고창2) 등 후보를 선출했다.
도의회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의장과 부의장, 29일 상임위원장, 30일 운영위원장을 최종 선출하게 된다.
일단 수적으로 우위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을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경쟁에 의한 갈등과 분열 등 불협화음 조짐이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
또 표결에 따른 후유증이 향후 후반기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도의원은 “조례 발의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국민의당 의원들이 반발하면 자칫 의정활동에 발이 묶일 수도 있다”면서 “일부 의원들은 벌써부터 후반기 의정활동에 차질을 걱정하는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들은 2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민주당 도의원들의 협치 없는 일방적인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장 자리에 저마다 출마했다. 또 원내교섭단체 협의에 반대하는 의사와 함께 단 한석도 국민의당에 양보

더민주 소속 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후보자 명단

- 의장 - 이상현(남원1)
- 제1부의장 - 조병서(부안2)
- 제2부의장 - 강영수(전주4)
- 운영위원장 - 송지용(완주1)
- 행정위원장 - 송성환(전주3)
- 환복위원장 - 최훈열(부안1)
- 문건위원장 - 한완수(임실)
- 산업위원장 - 이학수(정읍2)
- 교육위원장 - 장명식(고창2)

할수 없다는 민주정치의 대의를 저버리는 폭압적 결의를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한국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이 과반이상 다수였을 때에도 소수당에 상임위원장을 배정하는 민주적 관행이 세워졌고 이를 기준으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이를 준용했었다”면서 “더민주당이 국민의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노력해온 전북도민을 무시하는 중차대한 비민주적 폭거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21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중부권 7개 광역자치단체 상생발전 정책협의회에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권선택 대전시장과 김일재 전북행정부지사 등 비롯한 시장도지사들이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경북·충청·강원이 하나로

중부권 정책협의회 창립총회

허리경제권역 공동발전 기대

전북은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시 전라선 증편' 등 3개 과제 제안

전통적 지역 범위에서 벗어난 초광역협의체가 한반도 허리경제권역의 공동발전을 목표로 태어났다.
이번에 결성된 협의체는 기존의 전통적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영남권', '부·울·경', '영호남'과는 달리, 중부권 전체에 관한 정책을 연결고리로 삼아 탄성함으로써 앞으로 국가발전 전략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전북은 이번에 창설된 협의체 내에서 지역 발전 현안인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시 전라선 증편'을 포함한 4건의 과제를 공동협력과제로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지역발전과 중부

권 상생발전을 동시에 도모 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7명은 대전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창립했다.
협의회는 7개 시·도의 주요현안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호 정책공조 및 공동 관심사 협의 등을 통해 한반도 허리경제권역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중부권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협약을 체결해 향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하고 중부권 7개 시·도의 주요현안사항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상호 정책 공조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전북도는 동서3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시 전라선 증편, 전주~김천 복선전철 조기건설 등 3개의 사회기반시설 확충과제를 제안해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으며 상생발전 및 수원·핵심과제로 중부권 관광벨트 구축을 포함시켜 전북을 중부권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기위한 포석을 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중부권 7개 시도가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의지를 모아, 지역발전의 기틀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며 “중부권이 21세기 동북아 경제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협력과 단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023 세계 잼버리 유치를 위한 유럽 출장중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정영수 기자

영남권 신공항 계획 백지화

국토부, 김해공항 확장 결정

영남권(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또 무산됐다. (관련기사 9면)
국토교통부는 21일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F) 연구결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신공항 건설을 위한 입지 평가 결과에서 밀양이나 가덕도 같은 새로운 입지 대신 기존 김해공항의 확장을 선택한 것으로 사실상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다.
영남권 신공항은 지난해 1월19일 영남권 5개 지자체 합의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용역을 수행한 ADPF는 신공항 대신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가장 좋다는 의견을 내놨다.
ADPF는 당초 '밀양'과 '부산 가덕도' 외에 영남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36개 후보지를 선정해 뒤 항공 수요와 지형, 도시화 정도 등을 토대로 1차에서 25개 후보지를 골랐다.
이어 1차 검증에서 장애물 지역 등을 제외하고 8개로 추려낸 뒤 소음 정도, 비용, 접근성을 기준으로 밀양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 등 3개 후보지로 압축했다.
장 마리 슈발리에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F) 수석엔지니어는 “가덕도의 경우 자연공원 입지로 적합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며 건설 자체도 어렵다. 국토 남북 끝에 위치해 접근성도 좋지 않다”며 “밀양 역시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접근성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현재 제기되는 안전 관련 이슈를 해결할 수 있고 기존 시설 및 접근성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며 “이에 영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을 확장안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번 용역 결과는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학입지 결정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한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향후 영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뿐 아니라 영남권 모든 지역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영남권 거점공항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공항 확장은 기존 공항을 보강하는 것을 넘어 활주로와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 접근 교통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영수 기자

전주광역시 쓰레기소각장 주민시설 운영권 갈등 격화

전주광역시 쓰레기소각장 인근 삼산마을 주민편익시설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광역쓰레기소각장 인근 삼산마을 주민편익시설에 3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도 주민들과 갈등으로 운영권에서 밀려나 5년 동안 투자금이 돌려받지 못한 주민이 전주시와 시의회에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 삼산마을 주민편익시설을 지난 2013년까지 운영한 삼산패밀리랜드 운영진은 2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가 광역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삼산마을에 지원한 주민편익시설 위탁 운영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 공동으로 설립

한 삼산패밀리랜드 운영권을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빼앗겼다”며 전주시의 철저한 감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삼산패밀리랜드 임원으로 3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삼산마을로 이주한 채창수씨는 “주민편익시설을 운영권을 돌려받고 일부 지역주민들이 계획적으로 삼산패밀리랜드 대 표이사를 몰아내고 지역주민지원협의체를 재구성하면서 삼산패밀리랜드는 부당하게 운영권을 빼앗겼고, 5년 넘도록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채씨는 “지난 2007년 완공된 전주 광역쓰레기소각장 인근 삼산마을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찜질방과 사우나 시설 등을 갖춘 주민편

익시설을 건립, 2010년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을 획득한 삼산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삼산패밀리랜드에 3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당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함께 운영을 맡아 흑자 경영으로 전환시켰다”며 “직자를 면치 못하다 흑자로 전환되자 일부 지역주민들이 합세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몰아내고, 전주패밀리랜드로 이름을 바꿔 운영권과 자금을 모두 빼앗아 투자자만 재산상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삼산마을 일부 주민들이 공모해 삼산패밀리랜드 운영권을 독식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설립된 삼산패밀리랜드의 운영권을 빼앗고 투자자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전주시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김일재 기자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읍 '九景' 구경 오세요!

역사·문화·관광·자연이 어우러진 대표적 명소 각광!

1 내장산 단풍터널

2 옥정호 구절초 지방정원

3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4 무성서원과 상춘공원

5 백제가요 정읍사문화공원

6 피향정 연꽃

7 정읍천 벚꽃길

8 전설의 쌍화차거리

9 백제기사의 기념관